



세계화의 물결과 한국 농업의 과제

■ 임정빈 / 경향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지난 1995년 WTO 출범이후 국제경제 및 교역질서는 다자체제를 통한 세계화(globalization)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세계경제가 이렇게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와 함께 최근 세계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확산·심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세계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통상전략 차원에서 이러한 지역경제통합을 WTO 체제와 함께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 세계적 경제통합화 추세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의 무역자유화와 개별 국가 혹은 지역블록간의 쌍무적 자유무역협정체결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得보다 失의 농업현실, 소극자세 일관 안됨

이렇게 21세기 세계경제는 WTO와 FTA라

는 두 가지 형태의 세계화 물결 속에 긴밀하게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이며 이는 농업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부문은 원천적으로 부족한 농업부존자원 등 농업생산여건의 어려움으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WTO 협상과 한·칠레 FTA타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 움직임은 우리 농업부문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적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추세가 한국 농업에 미칠 효과를 점검하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국제 규범 및 무역의 흐름에 맞게 농업정책의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농업, 농촌, 농민의 육성을 통해 세계화의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대외적으



로는 가능한 한 농산물 수출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급격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출국과 수입국의 이해가 균형되게 반영되는 협상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의해 농업 부문에 발생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다수 농산물에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는 수입개방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사회형평과 안정차원에서 적절한 농가소득 보상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농업도 시장개방 확대에 발생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그리고 유통 효율성 증대 방안 등 근본적인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가공 수요개발 등의 노력이 필

요하다. 특히 시장개방의 부정적 영향만을 염두에 두고 수세적 입장에서 너무 실망만 하지 말고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국산 농산물을 해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는 적극적 자세를 갖고 수출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수출지원 및 촉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과일류, 화훼류 등의 품종개량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정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수준의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여 국내 수요와 해외 수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내 가격과 농가소득 감소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계량화 어려운 가지 창출, 과소평가 밀어

한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 농업의 유지와 보호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제고라 생각된다. 물론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의 형태

“

‘WTO·FTA의 축’ 세계경제 하나시장으로 통합, 농업도 예외 안돼
무엇보다 농업·농촌유지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인식 제고해야

”

로 나타나는 시장 지향적 무역질서 체제는 국제적인 자원이용의 효율성 증대,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 및 경제 효율성 제고를 통해 세계 경제발전과 각국의 경기회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국가에서나 농업은 여타 산업부문과 달리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민감한 분야이며, 농업 자체 특유의 다양한 비시장적 가치(non-market value)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무역자유화나 시장개방이 어려운 분야이다.

이것은 1948년 GATT가 창설된 이후 진행되어 왔던 8차례의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 중에서 지난 UR협상에서야 비로소 농업부문이 처음으로 협상의제로 포함되었으며, UR 협상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협상타결에 진통을 겪은 분야가 농업부문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WTO DDA 농업협상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공산품 분야에 비해 높은 보호 수준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공산품 수준에 버금가는 시장개방을 빠르게 요구하는 농산물 수출국들의 주장은 원천적으로 성급한 요구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수 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이미 시장개방으로 인한 구조조정과 충격흡수가 이루어진 공산품 분야와 달리 최근 예야 자유화의 물결 속에 휩쓸린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농업개

혁을 주장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국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정당한 요구로 판단된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조차 일부 비농업전문가나 단체, 그리고 비농업언론 등을 중심으로 우리 농업부문이 주장하는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와 대응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가령 “소탐대실론”, “농업부문의 발목잡기”, “언제까지 농업을 보호만 할 것인가?”라는 주장 등은 매우 우려스런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농업을 바라보는 이러한 비판적 견해는 2000년 중국산 마늘수입급증으로 인해 우리정부가 합법적으로 발동한 산업피해구제조치에 대한 반발로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중단 조치로 야기된 한·중 마늘분쟁, 국내 농업부문의 반발로 협상타결이 지연되었던 한·칠레 FTA 진행과정 등에서 빈번히 나타났다. 하지만 농업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시각들은 일관된 협상이지 표명을 통한 통상이의 확보차원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업생산 활동이 국민에게 식량공급이라는 고유의 기능 이외에 부수적으로 계량화 하기 어려운 다양한 비시장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부정영향 최소화, 대내외적 대응전략 짜야

어느 나라에서나 농업과 농촌사회의 유지는 국도의 균형발전을 통한 사회 및 정치안정, 홍수조절, 지하수 함양, 대기정화 및 환경보호,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 전통문화 보전, 생

물다양성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가 급속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아무런 대비책 마련도 없이 수출국들이 주장하는 대로 농업부문을 대폭 개방하여 농업부문이 붕괴된다면 농업활동과 농촌사회의 유지로 인해 창출되는 위와 같은 많은 사회적 순기능이 없어질 것이며, 향후 이러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는 사회 및 경제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농업이 발휘하는 다양한 비시장적 가치측면을 인식하여 OECD를 중심으로 적절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 평가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왜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 많은 선진국들과 미국,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마저도 자국의 농업보호와 활력 있는 농촌경제 유지를 위해 오랜 동안 노력해 왔으며, 지금도 농업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물론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세에서 우리 농업부문도 과거의 전통적인 농업형태나 농업정책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무튼 현재 우리 농업부문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물결 속에서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내외적 대응 전략의 마련뿐만 아니라 농업 및 농촌유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 제고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다. **농약정보**